

제 정 2021. 05. 20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시행세칙

(주)제이엠씨자산운용

제1조(제정 목적) 이 시행세칙은 제이엠씨자산운용(이하, ‘당사’)이 당사 내부통제기준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안을 관리하고자 수립되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제2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한다.

1. 자본시장법 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있는 투자대상 법인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 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판단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부수업무, 구체적인 업무특성/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한다.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
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4. 기업금융업무
5.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4조(정보교류통제 관련 전담 조직 설치 등) ①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 임원등(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와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지정
2. 정보교류차단 부문 설정 및 부문별.정보별 책임자 지정
3. 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차단방식, 예외적 교류 절차 수립 및 운영
4. 이해상충 유형 분류 및 대응방안 마련
5. 교육 및 공시의무 이행
6. 기타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 관련 이슈 처리

③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 및 준법감시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사용 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제6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3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내의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외적 교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5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③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 담당 임원
3.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발생소지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의 상시 정보교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주의.제한 목록 지정)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거래주의 상품에 대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임직원의 범위지정 및 감시

2. 거래주의 상품 매매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한 이해상충 여부 감시

③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한다.

제9조(이해상충 우려 거래) ①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6.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및 2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

2.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10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교류 제한) ① 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행법 시행령 제16조 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7조는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공시의무)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3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8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9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